

클린디젤, CNG에 비해 손색없다!

석유협회, CNG 버스 보조금 불공평 ... LPG 세제혜택도 개선 필요

정유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석유협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강현 석유협회장은 9월6일 기자간담회에서 “CNG 버스는 대당 2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친환경 면에서 이에 버금가는 클린디젤(Clean Diesel) 버스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경유버스를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CNG 버스 교체로 대기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버스 교체가 원인이 아니라 수도권 내 공장 이전, 건설현장 분진 감소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CNG를 쓰는 자동차의 비율이 전체 등록자동차의 0.3%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경유 버스 교체가 대기질 개선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강현 석유협회장은 “서울시가 버스 정책면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 교체되는 버스는 CNG와 클린디젤 중 하나를 운수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05년 가스공사 사장 시절 CNG 버스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오강현 회장은 “그때는 경유의 품질이 나빴는데 그동안 크게 개선됐다”며 “CNG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경유도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입하는 LPG(액화석유가스)와 국내에서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LPG와의 세제혜택이 불공정하다”며 “경유의 품질이 개선된 만큼 정부가 수송용 연료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06>